

야권, '김건희 특검법 관철·탄핵 추진' 투트랙 전략

민주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장내외 집회 총력...여론전 조성 혁신당, '탄핵소추'에 드라이브 황운하 "소추안 초안 이달 공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야권의 거센 '정권 퇴진' 공세가 '투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농성과 장외 집회 등을 통한 '김건희 특검법 관철' 여론전 조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이달 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처리해야 할 건 11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갈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식 등에 대한 원내 전략을 보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추진과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탄핵 관련된 부분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많은 분들이 녹취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탄핵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28일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열려있다"며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감찰관으로 장내 정리

가 안 되지 않다. 14일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는데 열흘 정도가 남아있다. 결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중 17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달이면 탄핵될 것이라 명태균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11월 중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 간 통화 녹취가 결정적 탄핵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결정이 발표가 이뤄진 날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제(탄핵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큰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 정서는 탄핵이다. 탄핵이 야당의 임포가 아닌 국민들의 최후 경고이기 때문에 여권도 이미 탄핵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고 머잖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쳐 윤 대통령 임기를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국민소환은 또 다른 방식의 탄핵"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른바 '탄핵다방'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윤정권을 규탄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추경호 "국민 우려 상응하는 대응 고민"

"지지율 하락 엄중하게 받아들여"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담은 당대로,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적 요소는 정쟁적 요소로 분리해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에 대한 당무감사 추진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관계자 소환부터 시작을 했으니 그것을 보고 당무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며 "당 내부에 조치가 필요한지는 살펴보겠다. 사무총장이 잘 판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당에서는 당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전할 수 있는 방안을 깊고 폭 넓게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자 장외 여론전에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선, "목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유죄 심증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12월13일까지 43일 간 회기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13일까지 43일 간 진행, 행정사무감사·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조례안 24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보고안 13건을 포함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총 14일 간 시본정 실·국·본부·직속기관 등과 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이 대상

이다. 정례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신수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나침반이다. 의원들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시정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광주의 민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합심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박필승 의원이 '연탄 없는 광주 에너지 전환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성현 기자

677조 예산 전쟁 시작... 여야, 강대강 대치

여 "건전재정...정부 원안 사수" 야 "여사 관련 사업 대폭 칼질" 윤 시정연설, 한 총리 대독 가닥

국회는 이번 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가며 11월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 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오는 18-25일로 잡혔다.

민주당은 최대 6조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업 예산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의 대폭 칼질을 버리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도 삭감 대상이다.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강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고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2조원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정부 예산안의 원안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방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두고 맞붙으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4일로 잡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신 11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총리가 대독하면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처음 있는 일이 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러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 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남은 두 달 동안 21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 보장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확기인 지난



10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18만2900원으로, 같은 달 5일의 18만8126원 보다 하락했고, 전년 대비 2만1668원이 떨어졌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비상대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